

‘광주전남특별시’에 막강 권한…수조원 재정지원 담아

광주·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안 들여다보니

300여개 특례 조항…광주정신·전라도 정체성 등 포함
시·군·구 기초단체 현행 유지…불이익 배제 원칙 명시
반도체·AI 사업, 예타 조사 면제…통합특별교부금 혜택

광주·전남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조광
역 자치정부의 구체적 설계가 담긴 특별
법 조안이 공개됐다. 단순한 행정구역 통
합을 넘어, 통합 이후 적응될 행정·재정·
권한 체계를 법으로 정리해 중앙·관할 이
양과 규제 완화, 안정적 재정 지원까지 포
괄한 것이 특징이다. ▶관련기사 2·5면

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
(기자)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
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
성됐으며, 행정·재정·산업·에너지·공공
기관 이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300개의
특례를 담았다.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
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, 조광역 자치정
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
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
을 맞췄다.

법안은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
고, 관할 구역을 하나로 묶은 단일 광역자
치단체의 명칭을 ‘광주전남특별시’로 명
시했다. 특히 제1조에는 5·18민주화운동
과 민주·인권·정의·평화의 광주정신, 전
라도 1000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
로 인공지능·반도체·에너지 등 미래 첨
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
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
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.

특별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
는 지위를 갖도록 규정됐다. 국가균형발
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
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도록 명시해. 단
순 통합이 아닌 중앙·관할·제도를 함께
비꾸는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.

행정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
위한 장치도 포함됐다. 특별시 청사는 기
존 광주·전남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,
광주와 전남의 시·군·구 행정단위도 현행
대로 유지하도록 했다. 행정통합으로 기
존에 누리던 행·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
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
도록 ‘불이익 배제 원칙’을 법에 명시한
점도 눈에 띈다.

권한 이양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

▶2면에 계속
이현규 기자 gnnews1@gwangnam.co.kr
이산하 기자 goback@gwangnam.co.kr

토·일 신문 쉽니다
온라인 뉴스는 gwangnam.co.kr에서 계속

광주·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



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‘광주·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’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사진제공=광주시

‘행정통합’, 19일부터 시도민 의견 듣는다

이달 말까지 27개 시군구 공청회 개최…공론화 작업 돌입

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·전남 행정통
합 논의를 위한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

본격 돌입한다.

시도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·

군·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

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.

광주에서는 19일 동구를 시작으로 22

일 서구, 23일 광산구, 27일 북구, 28일

남구 순서로 열린다.

전남은 19일 영암군에서 첫 공청회가

열리며 이어 20일 장성군, 21일 목포시와

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주민들과 의견

을 나눈다.

시도는 온라인 플랫폼, 추진협의체 등을

만들어 속의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. 시

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밀하
게 검토해 통합 논의 과정과 향후 정책 설
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행정적·재정적
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
김영록 지사는 “광주·전남 행정통합은
호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사안인 만큼
모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꼭 넓게 듣는
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플랫폼을 도
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감대 형성의 중
심 창구로 운영하고, 앞으로 열릴 주민설
명회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도록
하겠다”고 말했다.

임동민 기자 yang00@gwangnam.co.kr
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

김윤덕 “12·29 여객기 참사 사과…진상 밝힐 것”

〈국토교통부 장관〉

국회 국조특위서 국내 항공안전 전반 개선 약속

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·29 여
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
공식 사과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항공안

전 체계 전반의 개선을 약속했다.

▶관련기사 9·10면

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
‘12·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
국정조사특별위원회’에서 “항공안전을
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사

과의 말씀을 드린다”며 고개를 숙였다.

이어 “유가족과 국민께 명백한 진상
을 밝히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
국정조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”고 덧
붙였다.

김 장관은 “공항시설 개선, 조류충돌

예방, 항공사 안전역량 강화, 정부 감독
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‘항공혁신안전
망’을 수립해 이행 중”이라며 “방위각

시설 규정 미준수와 구조물 문제가 사고
피해를��웠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각 시
설 5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”고
전했다.

조류충돌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“무
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
예방 인력을 확충하고, 전 공항에 조류
레이더를 도입할 계획”이라며 “조류 유
인시설 관리 강화와 관제부처 협업을 통
해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”고
강조했다. 김 장관은 “현재 사고 원인
조사와 경찰 수사, 감사원 감사가 동시

에 진행되고 있다”며 “수사와 감사, 국
정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, 모든 절
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자료 제출과
설명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임영진 기자 looks@gwangnam.co.kr



15일 국회에서 열린 12·29 여객기 참사 진상

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

공식 사과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.



컨설팅 · 설치 · 인허가 · 리파워링 · 유지보수

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!
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!

(주)TH홀딩스

대표번호 : 062-953-8311 / 010-4572-7164